

기후위기 대응 해외 노조 사례

<기후위기와 노동>

류미경, 민주노총 국제국장

해외노조 대응 사례 검토 목적과 대상선정 이유

총연맹 차원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모델 발굴

- 기후위기 대응 또는 기후정의운동에 관한 해외 노동조합의 전략과 실천 내용을 취합하여 유형화하거나 매핑하는 것이 목적은 아님
- 국제적 또는 일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경험의 궤적을 살피고 민주노총이 향후 기후위기 대응의 전략적 방침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모델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
-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도출

국제 노동조합 기후 위기 대응의 공통 지반

‘정의로운 전환’

-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출발점- 기후변화가 실재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
- ‘사회정의’라는 지향에 동의- 신자유주의 정책, 국가 역할에 관한 친기업적 재조직화, 탈규제 등에 대한 반대. 기후 변화에 대한 ‘차별적 책임’ 관점, 자원 마련에 대한 진보적 해법, 기술적 해결(구체적인 내용은 쟁점적)에 동의
- 이러한 공통 지반은 ‘정의로운 전환’으로 요약됨-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 및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
- 그러나 ‘정의로운 전환’은 국제 기후협상에서 수용될 만큼 모호하거나 상이한 이해가 가능함

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전환의 스펙트럼

(Felli, 2014)

숙의 전략 (Deliberative strategy)	[강조점] ‘기후변화’라는 외부적 위험에 맞서 전인류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. 인권, 생태적 지속가능성, 사회정의, 신자유주의 탈규제 비판, 적응 (기술훈련, 사회보장제도),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[구현 경로] 국제기후협상 (시위/로비) [주요 행위자] 국제노동조합 조직/ 북반구노총 [위험과 한계]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자본주의의 근본적 소유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해법의 틀 내에서 모색
협력적 성장 전략 (Collaborative strategy)	[강조점] 기후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대응 (고용) [구현경로] 유럽식 사회모델의 구조적 틀 (노사정 삼자주의) [주요 행위자] 성장이 기후 환경 정책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 부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(국제산별/ 북반구 산별노조) [위험과 한계] 경쟁력/불균등 발전 속 노동자의 국가/지역적 분할, 자본주의적 관계의 모순을 정규직(북반구) 외부에 전가
사회주의적 전략 (Socialist Strategy)	[강조점] 자본주의적 부의 생산의 모순에 환경파괴의 기원이 있고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변혁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. (정치적 의지가 아닌 현재의 경제 체제의 변화가 중요) [구현경로] 노동조합 내, 노동조합을 통한 기후정의운동의 형성, 노동자 정치교육, 정치동맹의 형성 [주요 행위자] 일국적 노동조합 [결정적 요소]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 강조되어야

남아공노총(COSATU)과 남아공금속노조(NUMSA)

(2009~2012)

- 배경: 제조업 쇠퇴, 정부의 '녹색 신자유주의'(기후변화 인정, 광물-에너지 복합 중심의 축적 지소, 시장 매커니즘 기반,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주도 접근)
- 계기: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 (NEDLAC)의 탄소감축 계획 및 에너지믹스 관한 통합적 자원계획 논의, 남아공 더반 COP17
- 경로: 의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(세미나 등) -> 광범위한 시민사회 동원 프로그램 (100만 개의 기후 일자리 캠페인) -> 금속노조 주도의 내부 역량강화 (연구팀 구성, 해외탐방학습, 교육위원 및 간부 교육). 조합원 의식조사-> 집단적 토론을 통한 핵심방침 수립 (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)
- 의제: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요금 인상 대응, 태양열 온수기 보급 모니터링 및 개입, 사회적 소유 기반 재생에너지 촉진

남아공 노동조합의 기본 입장

- 기후변화와 계급 투쟁
 - 재생에너지 기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승인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필요
 - 정의로운 전환이 또다른 자본주의적 개념이 되도록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경로는 노동자가 통제하는 민주적 사회적 소유를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. 부의생산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 장기적 논의 필요
-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재생 에너지 구축
 - 지역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기술 상품의 제조를 촉진
 - 협동조합, 지방정부 소유, 사회화된 준 국가기구를 통한 재생에너지 촉진

프랑스 노총(CGT)의 ‘사회생태적 전환’

2018~2021

- 배경: 마크롱 정부의 한계적 기후대응,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운동
- 계기: <기후와 회복탄력성 법> 도입
- 경로: 총연맹 기본 과제 및 방침 채택, 광범위한 정치 동맹 (공동 대선 요구 수립), 현장 활동, 국제적 기후정의운동 동맹 형성
- 의제: 노동권 강화 (불안정 노동), 산업재배치, 지역기반 농업식량 생산, 주요 산업 재공영화 국유화, 공공서비스 강화, 글로벌 규범 도입

프랑스 노총의 기본 입장

-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노동자들의 의견 표출,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지식과 노하우 반영을 통한 생태 사회 전환 계획 수립
- 에너지와 자원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핵심에 둔 생태 사회적 비상사태 대응
- 생태위기의 불평등 (가장 불안정한 계층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름) 공적 영역을 통한 포괄적 대응 계획 수립,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정의와 평등의 실현
- 기후정의운동과 민주주의 투쟁 (노동기본권 확대)
- 국제적 환경 노동기준 구속력 강화
- 일국적/국제적 정치동맹 형성

시사점

노동조합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

- 정부와 기업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자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함
- 에너지 전환, 경제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조합의 총체적 전략 수립 필요
- 기후위기는 글로벌한 대응을 요구함. 국제적 연대를 촉진하는 데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함